

국힘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 지원에 2000억원 투입”

‘검증 테스크포스’ 긴급 당정회의 유류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 수산물 소비 촉진 다양한 협약 춧돌집회 예고 야권에 날선 비판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가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으로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을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음식점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방류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성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햇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구연 1차장은 “정부는 방류 과정 모니터링 체계를 수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도록 방류 과정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제도입 검토

“7~8개월 내 8000명 순차 채용” 한 총리 “치안 위주 경찰 재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죠평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동훈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우려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추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쁜대로 수감할 만한 논거는 후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피켓 떼라” vs “통일장관 자격 없어, 나가라”

국회 외통위 여야 신경전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의 “(청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소신과 철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장

관으로 지명된 것도 부당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